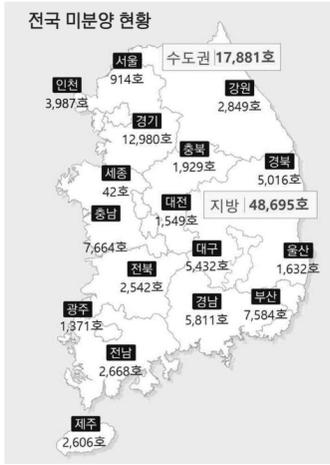


# 봄 성수기 앞두고 주택거래 꿈틀... 공급 지표는 '꽝꽝'



## 전년대비 매매 광주 32%·전남 53% 늘어 인허가·준공 급감... 광주 분양 4개월째 '0' 미분양 감소 속 전남 준공후미분양 1983호

광주·전남지역의 주택 거래는 회복됐지만, 공급 지표는 급격히 악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또 부동산 경기 약화의 영향으로 전남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000호까지 늘어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주택통계"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은 1578건으로 전월(1663건) 대비 5.1%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1194건) 대비해서는 32.2% 급증했다.

또 전남지역은 1986건으로 전년 동월(1302건) 대비 52.5% 늘었다. 전월(2378건) 대비로는 16.5% 감소했지만, 지방도 평균 39.5%를 웃돌며 지방도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폭으로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의 경우 광주 4871건, 전남 4567건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전월(4445건) 대비 9.6%, 전년 동월(3584건) 대비 35.9% 증가했고, 전남은 전월(4084건) 대비 11.8%,



전년 동월(4192건) 대비 8.9% 늘었다. 공급 지표 감소세는 두드러졌다. 1월 광주의 주택 인허가는 8호에 그치면서 1년 전 253호에 비해 96.8% 급감했다. 이는 전국 최대 감소율이며, 광역 시 중에서 유일한 감소였다. 전남은 1062호로 전년 동월(1836호) 대비 42.2% 줄었다. 준공은 광주 71호, 전남 280호로 전년 동월(광주 2747호, 전남 1857호) 대비

각각 97.4%, 84.9% 감소했다. 분양(공동주택 기준)은 광주와 전남 모두 실적이 없었다. 광주는 지난 9월 571건 이후 4개월째 분양물량이 전무했다. 다만 착공은 광주(2호→165호), 전남(148호→354호) 모두 증가했다. 1월 미분양 주택 수는 광주 1371호, 전남 2668호로 전월 대비 각각 33호(-2.4%), 47호(-1.7%) 감소했다. 같은기간 악성 미분양으로 알려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광주가 전월 대비 23호(-2.9%) 줄어든 758호였지만, 전남은 전월 대비 159호(8.7%) 증가한 1983호였다. 전국적으로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76호로 전월 대비 0.1% (66호) 늘었다. 작년 12월 소폭 감소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수도권이 1만7881호로 12.6% (1998호) 늘었고 지방(4만8695호)은 3.8% (1932호)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9555호로 집계돼 전월 대비 3.2% (914호)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 86.7%에 해당하는 2만 5612호가 지방 소재로 파악됐다. 경남이 3537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3268호), 부산(3249호), 대구(3156호), 제주(2102호), 충남(2021호), 경기(1996호), 전남(1983호) 등 순이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 오비맥주, 광주 북구에 '안심귀가 안내판' 태양광 충전방식 LED 큐브형...야간보행 안전·범죄 예방

오비맥주는 광주 북구청·북부경찰서와 협력해 지역 야간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친환경 '안심귀가 안내판' 설치 사업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안심귀가 안내판 설치 사업은 오비맥주 광주공장이 위치한 광주 북구 주민들의 야간 보행 안전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비는 지난해 말 오비맥주가 광주 북구와 사랑의열매를 통해 꿈나무사회복지관에 기부한 1000만 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안내판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낮 동안 충전되고, 야간에 자동으로 점등되는 친환경 시설물이다.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태양광 충전 방식의 안내판을 도입했다. 설치 지역은 세 기관과 긴밀한 논의

를 거쳐 북구 내 범죄 취약지역인 용주로와 반룡로 일대 원룸촌과 골목길 등 총 5곳으로 선정했다. LED 큐브형의 안내판은 어두운 골목길의 가시성을 높여 범죄 예방(CPTED,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기여하고, 멀리서도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보행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 부사장은 "이번 안심귀가 안내판 설치 사업은 주민들의 야간 보행 불안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범죄 예방으로 이어질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비맥주는 지난해 12월 광주 북구청, 광주북부경찰서와 함께 시민 대상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음주운전 없는 안전 귀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정현아 기자 aura@



## 전아연 광주시회, 입주민 권리 찾기 선포식 불합리한 법령·규제 개선 앞장...이사회서 한재용 회장 재추대

전아연 광주시회는 최근 전일빌딩 4층에서 이사회를 열고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사업 추진실적 보고 후 2026년도 사업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임원 선출에서 한재용 회장(사진)이 재추대됐으며, 새 임원진을 선출해 3년간 광주시회를 이끌게 됐다. 전아연 광주시회는 지역 1300여개 아파트 단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과도한 형식적인 점검·검사제도 등 입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안을 각 부서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아파트 입주민 권익 강화를 위한 '주민 권리 찾기' 선포식을 갖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해 관련법을 지키고 부당한 업무 간섭하지 않기, 불합리한 법령과 형식적인 각종 감사와 점검제도, 교육과 비용 줄이기, 공사와 각종 운영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기, 소

음과 흡연·주차 분쟁 줄이기, 재활용품 분류,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 관리규약 준칙 중 편향적이라고 판단되는 조항의 개정과 기존 홈페이지보다 20여개 이상 차별화된 기능을 갖춘 신규 홈페이지 무료 개설을 광주시에 요구하기로 했다.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광주시장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재용 시회장은 "아파트 주인은 입주민"이라며 "동 대표들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 위상을 높이고 공동체 운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해 자치단체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자치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체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광기정 광주시장은 27일 첨단3지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창업동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으로 여는 AI·반도체 산업 비전 설명회'에서 미래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 전남광주특별시, 도시실증 등 AI·반도체 대도약

### 광주시, AI·반도체 산업 비전 설명회 개최 특별법 특례 공유...초광역 산업 전략 공개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판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합특별법에 담긴 핵심 특례와 초광역 산업 전략이 공개되면서 첨단산업 생태계 재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광주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은 최근 첨단3지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창업동 4층 컨퍼런스홀에서 '광주·전남 통합으로 여는 AI·반도체 산업 비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광기정 시장과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을 비롯해 이찬희 전남장택기술자주 대표, 이범식 한국에너지공과대학원 교수, 김운섭 광주테크노파크 본부장, 지역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통합 이후 산업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설명회의 핵심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위한 특별법안의 특례에 대한 설명이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과 인공지능(AI) 도시 실증지구 조성 근거가 포함됐다. 이는 광주전남이 국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서 선도적 제도로 토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조항에는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제243조) △인공지능 혁신클러스터 조성 특례(제242조)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특례(제244조·제246조) △AI 실증밸리 조성(제245조) △AI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제245조) △인공지능·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 육성(제247조) △AI 기반 도시·행정지능화(제248조·제249조) △AI 기반 삶의 질 향상 및 약자 보호(제233조)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제250조·제251조) 등이 담겼다. AI 인프라 확충에서 산업 집적, 도시 실증, 시민 체감, 반도체 산업 육성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구조다. 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AI)·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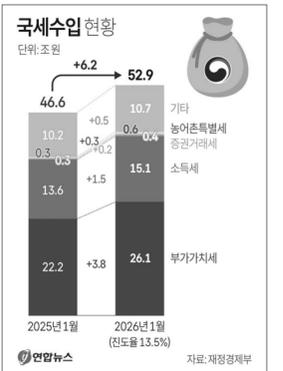
반도체를 3대 축으로 글로벌 미래산업 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광주권의 인공지능(AI) 인프라와 인재 역량, 전남 서부권의 전력·용수 자원, 동부권의 산업 기반을 연계해 초광역 첨단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오상진 시장은 "그동안 광주는 AI 인프라와 인재, 전남은 에너지와 산업단지 등 각자의 강점이 있었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면서 "홀어진 강점을 연결해 함께 키우고, 초광역 전략으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 기업들은 초광역 통합 체계 아래 산업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경우 수도권 중심 구조에 대응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AI 실증환경 확대와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광기정 시장은 "첨단3지구 AI집적단지 지정, 전남 동부권과 광주를 잇는 AX산업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지도는 광주전남 통합을 통해 그릴 수 있었다"며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머무는 '인 광주'의 꿈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

## 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원 확대

### 수수로 최대 100%...업체 경영부담 경감

전남도가 건설산업 활력을 높이고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민간 건설현장 중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한 원도급사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체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이는 장치다. 다만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해 영세·중소 하도급 업체에는 적지 않은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다.

전남도는 제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100%로 올려 하도급 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원·하도급 간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 전남도는 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자금지원 강화, 입찰 포기자 부정당업자 참가자격 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정환 기자 holbul@gwangnam.co.kr



## 부동산·주식거래 증가 국세 6조원 더 걷혔다

새해 첫 달 국세 수입이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6조원 이상 늘었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월보다 6조2000억원(13.4%) 증가한 규모다. 1월 진도율은 13.5%다. 올해 예산(390조2000억원) 대비 13.5% 견뎠다는 의미다. 특히 5년 평균 1월 진도율(12.5%)보다 1%p 높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늘어난 것이 주 요인이다. 부가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3조8000억원(17.3%) 증가한 26조1000억원 견뎠다. 소득세 수입은 1조5000억원(11.1%) 늘어난 15조1000억원이었다. 취업자 수와 연발 상여금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9000억원 증가했고,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는 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거래대금이 늘며 2000억원 증가했고,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3000억원 늘었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204조6000억원으로 83.8% 폭증했다. 코스피는 302조7000억원 거래돼 73.3% 늘었다. 1월 국세 수입에는 지난해 12월 거래대금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반영됐다. 올해도 증시 활황이 이어지고 있고 증권거래세율이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세수 증대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씩 상향됐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기존 0%에서 0.05%로, 코스닥·K-OTC 시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됐다. 정부 예산상 올해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실적보다 2조원 늘어난 5조4000억원이다. 그 외 상속·증여세는 3000억원 증가했으며, 법인세·관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